

배포 일시	2022. 6. 13.(월)		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	책임자	과 장 안세희 (044-201-4937)
		담당자	사무관 황규오 (044-201-4944)
보도일시	2022년 6월 1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3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-농식품부-해수부, 빈집 관리 새 틀 짚다

- 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 · 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, 이하 국토부),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와 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, 이하 해수부)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‘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’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,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*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도시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/ 농촌·어촌 : 「농어촌정비법」

** 입찰일정 : 사전규격공고(6.14), 입찰공고(6.20), 계약체결(8월 중)

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9개월 / 용역금액 : 100백만원(설계가 기준)

□ 현재는,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·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.

○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‘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’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,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.

- 우선,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,
 - 정책목표·지역여건 등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·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,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.
 - 이와 함께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과 「농어촌정비법」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통합된 가칭 「빈집법」(안)을 마련할 예정이다.
-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지자체, 연구기관,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·운영하여 심도 깊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며,
-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“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” 라며,
 - “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, 연구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	책임자	과 장	안세희 (044-201-4937)
		담당자	사무관	황규오 (044-201-4944)
	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	책임자	과 장	송태복 (044-201-1551)
		담당자	사무관	한우리 (044-201-1558)
	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	책임자	과 장	김태경 (044-200-61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정 (044-200-6048)

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문

빈집 업무 주관부처로서 국토교통부(이하 '국토부') 및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'농식품부'), 해양수산부(이하 '해수부')는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·관리·활용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1. 본 협약은 빈집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.
2. 국토부, 농식품부 및 해수부는 빈집 통계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통일된 현황DB를 구축하고 공신력·정확도·활용도 높은 전국 단위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3. 각 기관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·「농어촌정비법」에서 정한 전문기관에게 통계 관리·제공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국가의 빈집 통계 관리 권한 확보·실태조사 지침의 일원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.
4. 중장기적으로 국가 승인 통계화, 빈집 활용 및 정ب지원을 위한 통일된 빈집법 제정, 빈집 사업발굴, 관련 예산 지원, 세제 개편 등 제도 연구·정비를 적극 노력한다.

2022년 4월 18일

국토교통부
주택토지실장

농림축산식품부
차관보

해양수산부
수산정책실장

김수장

김인중

김준석